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담당 :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010-9727-4035, 안진걸 공동운
영위원장 019-279-4251, ask2016change@gmail.com)
제 목 [보도자료] 2016총선넷,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및 종합명단 제시, 향후 주요 활
동계획 발표 및 '3분 총선' 시연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6. 3. 15. (총 31쪽)

보 도 자 료

곽상도, 권성동, 김무성, 김효재, 윤상현, 윤종기, 조전혁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박민식, 이노근, 이철우, 하태경 테러방지법 주도 후보 '시민 컷오프' 대상 발표 (총선넷 낙천축구 대상은 1-2차 포함 총 19인)

유권자들을 위한 '3분 총선' 모바일페이지 시연도 진행
총선넷, 19인 부적격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낙천·낙선운동 돌입
일시 : 2016.3.15.(화) 오전 11시30분,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410호

1. 전국에서 34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가 오늘(3/15)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10호(4층)에서 "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2차 명단 발표 및 공천부적격자 명단 종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2016총선넷은 곽상도, 권성동, 김무성, 김효재, 윤상현, 윤종기, 조전혁 후보 등 7명을 2차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여 발표하고, 각 정당에게 아직 공천이 안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말 것을, 공천이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테러방지 국민감시 악법인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박민식, 이노근, 이철우, 하태경 4명(법안 대표발의자들)을 '시민 컷오프' 대상으로 선정해 총선 과정에서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로서 2016총선넷은 1차 공천부적격자 9인을 포함하여, 2차 공천부적격자 및 시민 컷오프 명단 11인을 발표함으로써 총 19인(이노근후보는 1차와 시민컷

오프 중복)을 "공천이 되지 않거나 공천이 철회되어야할 후보들"로 선정했다.

3. 지난 2월 말부터 총선청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역사정의실천연대, 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경제민주화와올들의총선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인천평화복지연대·2016총선넷인천유권자위원회, 강원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울산시민연대, 충북총선시민네트워크, 부산총선시민네트워크 등 부문별·의제별·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낙천축구명단이나 심판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16총선넷은 각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낙천축구 명단과,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했던 공천부적격자 시민신고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된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및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3월 3일 발표한 1차 명단에 이어, 추가로 3월 15일 오늘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선정·발표하였다.
 4. 2016총선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2차 명단 발표 이후 진행될 낙천·낙선운동 계획과 약속운동 및 유권자위원회 활동계획을 밝혔다. 또한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역 출마자들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는 '3분 총선'(www.vote0413.net) 모바일사이트를 시연하였다. 끝.
- 붙임 1. 2016총선넷 2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 순서
 - 붙임 2. 2016총선넷 2차 공천부적격자/'시민 컷오프' 선정자료
 - 붙임 3. 2016총선넷 향후 사업계획
 - 붙임 4. 2016총선넷 특별성명_박근혜 대통령은 부당한 선거개입 중단하라
 - 붙임 5. 2016총선넷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_3/3 발표
- 별첨자료 1. 각 부문·의제·지역·단체별 낙천(심판) 명단 발표자료 종합

▣ 붙임 1. 2016총선넷 2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순서>

사회 :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1. 인사말
 - 2016총선넷 공동대표
2. 공천부적격자 관련 각계 발언
 - 각계 대표
3. 2016총선넷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4. 시민컷오프 심판대상자 발표
5. 향후 사업계획 발표
6. '3분 총선' 사이트(3분 총선 모바일사이트) 시연
7. 특별성명 낭독
8. 질의응답

▣ 붙임 2. 2016총선넷 2차 공천부적격자/시민 컷오프 선정자료

2016총선넷 2차 공천부적격자/시민 컷오프 선정자료

2016.03.15. 2016총선넷 운영위원회

1. 2016총선넷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배경과 선정과정

- 2016총선넷은 발족 시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공표하며 발족함
- 이에 호응하여 2월말부터 각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 개별 참가단체에서 심판을 촉구하거나 공천에 반대하는 명단을 발표함(8개 의제·부문별 연대기구, 5개 지역 총 92명/중복제외 66명, 3월 11일 기준)
- 2016 총선넷은 각 부문별 지역별 연대기구의 공천부적격자 발표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와 제보를 받기 위해 공천부적격자 시민 신고/제보 캠페인을 진행해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250여건의 신고/제보를 접수함(3/10 현재)
- 각계각층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 및 단체들이 이미 발표한 심판명단, 낙천을 요구하는 인사들 중에서도 각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나 관련 단체들이 최악의 부적격자로 지목한 인사들을 우선적으로 검토
- 공천부적격자 신고 및 제보 캠페인에 접수된 부적격자 제보내용을 함께 검토
- 동시에 공직자 및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과 기본적인 자질,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인사들로 압축하여 선정
- 1차 공천부적격자 9명에 대한 명단 발표(3/3)이후 각 의제별 연대기구/단체/지역에서 발표한 명단 취합하여 1차 때와 같은 기준으로 심층 논의 및 검토 진행

2. 2012총선넷 2차 공천부적격자 선정 경과

- ▶ 1월 18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최초로 김석기 예비후보에 대한 낙천 촉구 입장 발표 및 수차례 항의방문(새누리당사, 경주 지역 사무실 등) 진행
- ▶ 2월 17일 2016총선넷 발족기자회견 개최, 낙천낙선 기준 예시안 제시

- ▶ 2월 22일 2016총선넷 1차 운영위원회, 공천부적격자 기준 검토, 선별방식 논의
- ▶ 2월 23일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범 및 낙천촉구 명단 18인 발표
- ▶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19대 국회 반 환경의원 17인 발표
- ▶ 2월 23일 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시민 신고/제보 캠페인 시작
- ▶ 2월 24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황우여, 윤상현, 김현중 등 6인 낙천촉구 명단 발표
- ▶ 2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올들의 총선연대, 경제민주화 파기 및 서민경제 파탄 인사로 최경환 낙천 촉구
- ▶ 2월 26일 2016총선넷 2차 운영위원회¹⁾,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및 선정사유 검토하고, 일부 명단 추가와 세부적인 선정사유 기술은 공동운영위원장단·운영위원·사무처 연석회의에 위임
- ▶ 2월 28일 테러방지 국민감시 악법인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인사들(법안 대표 발의자 등)에 대한 낙선운동 강력 경고 2016총선넷 긴급성명 발표
- ▶ 3월 1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 등, 역사정의 파괴 낙천촉구 5인 명단 발표
- ▶ 3월 1일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단·운영위원·사무처 연석회의에서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최종 검토 진행
- ▶ 3월 2일 강원연대회의의 낙천 촉구 명단 6인 발표
- ▶ 3월 2일 FTA대응범국민대책위, 한미FTA 강행에 앞장선 김현중, 김종훈, 정운천 후보 낙천 촉구
- ▶ 3월 2일 울산시민연대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 ▶ 3월 2일 2016총선넷 운영위원회 최종명단 승인
- ▶ 3월 3일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 ▶ 3월 6일 공천부적격자 제보/신고 2차 신고 마감
- ▶ 3월 7일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공천부적격자 6명 발표
- ▶ 3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천반대자 명단(27명) 발표
- ▶ 3월 10일 올들의총선연대 공천반대 5인 명단 발표
- ▶ 3월 11일 언론단체 공천반대 4인 명단 발표
- ▶ 3월 11일 2016총선넷 4차 운영위원회_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1차 검토
- ▶ 3월 14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사학비리 비호인

- 사 3명 발표 및 낙천 촉구
- ▶ 3월 14일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모임, MB 자원외교 파탄책임자 및 진상규명 방해자 3인 공천 반대 성명 발표
- ▶ 3월 14일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주도 심판 의원 6명 발표
- ▶ 3월 14일 초록투표네트워크 반환경후보 10인 명단 발표
- ▶ 3월 14일 2016부산총선시민네트워크 낙천낙선 5인 명단 발표
- ▶ 3월 14일 2016총선넷 5차 운영위원회_2차 공천부적격자 및 '시민 컷오프' 명단 2차 검토회의 및 최종 확정
- ▶ 3월 15일 강동연대회의의 강동구 지역 공천부적격자 2인 명단 발표

3. 공천부적격자 선정기준

1) 1차 기준 - 2016총선넷이 발족 시 제시한 기준

-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 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사건 주도자, 군사독재 정권의 핵심 부역자
- 국민들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에 대한 반대 주도자
- 노동개악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주도자
- 세월호 참사 등 진상규명 방해 및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 용산 참사와 같은 국가폭력행위 주도자
-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성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자
- 역사정의를 파괴하고 국정교과서 강행, 위안부 합의 비호 앞장선 자
- 탈핵에 반대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자
- 기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합의로 선정한 자

2) 추가 기준 - 총선넷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추가 기준

- 청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에 반대하거나 불법·부당한 인사 청탁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일자리를 빼앗고 청년들을 좌절케 한 자
- 국민이나 약자들을 상대로 막말과 조롱을 일삼아 공직자나 국민의 대표자로서 부적절한 자
- 국민 안전 관련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정책에 앞장선 자

1) 2016총선넷에 참여한 34개의 연대기구와 가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한 총 40여명의 운영위원들이 참여하는 총선넷 의사결정 기구.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시에는 운영위원회 논의 뿐만 아니라 전국 유권자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칠 예정이다.

- 국민사찰범이자 국정원 권한 강화법인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민 컷오프'대상자로 선정하여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에 포함시키기로 2016총선넷 4차 운영위원회(3/11)에서 결정함

3) 2차 공천부적격자 검토 대상자

-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에서 제외된 후보자
- 전·현직 국회의원, 전직 고위공직자를 1차 대상으로 검토
- 2016총선넷에 참가한 (부문/의제/지역별)연대기구나 각 단체가 이미 발표했거나 제출한 심판 대상자
- 시민들이 제보한 공천부적격자(3/6까지 2차 신고/제보 진행)
- 이들 중 공천부적격 사유가 명백하고, 공직자 및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과 기본적 자질,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후보자

4.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및 '시민 컷오프' 명단

■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2)

	이름	직책	소속	지역구	선정 사유
1	곽상도	전) 민정수석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 공안조작 사건의 담당검사
2	권성동 ³⁾	현) 국회의원	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 노동계약 추진 - 환경과괴정책 옹호
3	김무성	현) 국회의원	새누리당	부산 영도구	- 역사교과서 국정화 - 반노동 발언과 노동계약 주도 - NLL대화록 낭독 -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발언
4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 수석비서관	새누리당	서울 성북을	- 디도스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유죄
5	윤상현	현) 국회의원	새누리당	인천 남구을	- NLL대화록 관련 말바꾸기 - 막말과 정당민주주의 훼손
6	윤종기	전)인천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 제주해군기지 관련 인권침해 책임자
7	조전혁	전) 국회의원	새누리당	인천 남동을	- 법원의 금지결정을 무시하고 전교조 명단 공개

2) 명단은 가나다순임

3) 권성동, 윤종기, 조전혁, 이철우, 이노근 후보는 3/14일 현재 공천이 되어 공천 철회를 요구함

▣ 테러방지법 발의 '시민 컷오프' 의원 명단⁴⁾ 및 선정 사유

	이름	직책	소속	지역구	선정 사유
1	이철우	현) 국회의원 전)경상북도 정무부지사	새누리당	경북 김천	1)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2015.5.19.) 발의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2016.2.22)발의
2	이노근 ⁵⁾	현) 국회의원 전)노원구청장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1)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2015.3.12) 2)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15.6.24.)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3	하태경	현) 국회의원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갑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3.3.26)
4	박민식	현)국회의원	새누리당	부산 북구 • 강서구갑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3.6)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5.6.1)

4)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한 송영근 의원('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과 이병석 의원(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발의)은 제외함. 서상기(국가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 주호영 의원(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은 예초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3/14일 컷오프되어 발표에서 제외.

5) 이노근 의원은, 2016총선넷이 3/3 발표한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음

1) 광상도(새누리당,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대구 중남구)

- 주요경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2015.03. ~ 2015.11.),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2013.03. ~ 2013.08.)
- 공천부적격 제안 단체 : 대구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시민제보

○ 선정사유

① 조작사건으로 확인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

- 광상도 후보는 1991년 5월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강기훈씨 조사과정에서 잠 안재우기(고문)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짐⁶⁾. 이 사건에 대해서 추후에도 반성 혹은 사과 발언을 한적 없음.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재심이 청구되었고, 지난 2014년 2월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에 대해 무혐의-무죄로 재판결되었고,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됨. 즉 공안당국의 조작으로 확인됨.
- 광상도 후보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2016.01.27.자 인터넷한겨레)에서 “조임검사로 수사 보조를 한 것은 맞지만 의사 결정을 할 위치는 아니었다”고 변명.

②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공직 임명 8개월 만에 사임

- 민정수석 사임 이후 2015년 3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임명됨. 8개월 만인 11월에 사임하고 총선 출마.

○ 선정의 변

- 독재정권 시절 공안통치를 위한 대표적 조작사건인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강기훈씨가 재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전혀 없음.
- 낙하산 인사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된 주요 공직을, 또 다른 공직을 이유로 중도해 포기한 것 역시 무책임한 처사로 국민의 대표자가 될 자격 및 자질이 부족함.

6) 광상도 후보가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강기훈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991년 6월 서울 지방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잠 안 재우기를 담당하셨던 검사 양반,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증언.

2) 권성동(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강릉시) - 공천철회요구

- 주요경력 : 제18, 19대 국회의원,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2008.07 ~ 2009.08)
- 공천부적격 제안 단체 : 환경운동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국민행동, 총선 청년네트워크, 강원연대회의, MB자원외교사기의혹진상규명국민모임 시민제보

○ 선정사유

① 노동권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2014년 10월 노동시간 연장, 휴일수당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당시 한국노총, 민주노총, 시민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파장이 커지자 법안 공동 발의한 동료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짐(강원연대회의 제출 사유)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여 총선청년네트워크의 공천부적격자로 선정

② 환경파괴 정책을 옹호하고 탈핵에 반대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앞장섬. 권성동 의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촉구하며 “케이블카 설치된 다음에 초지가 복원이 되면 다시 산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2015.9.10. 환노위 국감)”라며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
- 원자력발전 홍보예산 26억원 삭감에 대한 반대발언(2012.11.25,예산결산특별위원회)
- 4대강사업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반대발언(2013.10.15,국감법제사법위원회)

③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국정조사 당시 핵심증인 채택 반대

- 국정조사 당시 여당 측 간사 의원으로 MB자원외교 문제와 세금 낭비의 실제적 진실을 밝혀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핵심증인의 채택에 반대하고 사사건건 진상규명을 방해함.

○ 선정의 변

- 청년단체, 노동단체, 환경단체, 지역단체, MB자원외교진상규명모임, 시민제보 등 다수의 단체에서 공천부적격자로 제안됨

3) 김무성(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영도)

- 주요경력 : 새누리당 당대표, 15-19대 국회의원
- 공천부적격 제안단체 : 2016부산총선시민네트워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경제민주화와을들의총선연대, 청년총선네트워크, 시민제보

○ 선정사유

①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 새누리당 대표로 2013년 친일·미화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머물자 김정 한국사교과서를 색깔론으로 매도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
- 당 의원 모임 ‘근현대사 연구교실’ 꾸려 ‘좌파와 역사전쟁’에서 승리 다짐(2013.9.4.)
- 좌파세력이 준동하여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2015.7.31. 미국 로스앤젤레스)
- “지금 대한민국 국사학자는 90%가 좌파로 전환됐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꼭 이겨야만 하는 역사전쟁이 시작됐다. 좌파의 사슬이 강해 어쩔 수 없이 국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2015.10.17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산악회 발대식)

② 반 노동 발언과 노동개악 법안 대표 발의

- 노동조건 악화시키는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대표 발의
- 반노동 발언 : “노조가 쇠파이프 안 휘둘렀으면 소득 3만불 됐을 것”7), “<시엔엔>(CNN)에 연일 쇠파이프 보도되는데, 어느 나라가 투자하겠느냐”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틀린 발언을 일삼으며, 계속해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골적인 반노동적 인식을 드러냄.

③ 불법 유출된 NLL 관련 정상회담 회의록을 선거유세장에서 낭독

- 7) 김 대표는 “노조 가입자 수는 10%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막대하다”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노조, 귀족노조가 매년 불법 파업을 일삼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공권력을 투입하면 (노조가) 쇠파이프로 (전경들을) 두들겨팼다. 공권력이 그들에 대해 대응하지 못해 2만불에서 10년을 고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3만불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최근 조선업계 최초로 공동파업을 선언한 조선업체들을 겨냥해 “그 회사가 망하면 괜찮은데 <시엔엔>(CNN)에 연일 쇠파이프 보도되는데, 어느 나라가 투자하겠느냐”며 “우리 사회 발전에 끼친 폐악은 엄청나다.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겨레 2015.09.02
- 8) 관련하여 NLL대화록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정문헌 의원을 낙천대상으로 검토했으나 공천에 탈락하여 제외

- 지난 18대 대선 직전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정상회담 회의록 일부를 거의 그대로 낭독함.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대화록을)짜라시(증권이 정보지)에서 봤다’고 주장

④ 청년복지정책 반대

-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15.11.6. 최고위원회의)
-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16.1.6. 최고중진연석회의)

⑤ 사학비리 혐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회 증인 불채택을 요청

- 2013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여야 교문위 간사가 협의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해 국감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요청을 했다는 증언과 보도가 있음. 관련하여 KBS 추적60분 보도 및 당시 야당 교문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 <신동아>의 추가보도가 있었음.
-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은 이인수 총장의 증인채택이 논의되던 시기인 2013년 2학기에 학교의 채용 조건과도 맞지 않은 상황에서, 만 서른 살에 석사학위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정규직 교수로 채용되기도 했음.

⑥ 여성 차별, 약자 혐오 발언

- 여성차별 발언 : “아기 많이 낳는 순서대로 여성 비례 공천 줘야”고 발언하여 출산과 공천 여부를 연관시켜 비혼 여성이나 무자녀인 기혼여성 입장에서 차별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2014.11.03.)⁹⁾
- 인종차별 발언 :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에서 함께 한 흑인 유학생에게 “연탄 색깔하고 얼굴 색깔이 똑같다”고 발언해 인종 차별 논란이 일자 사과

○ 선정의 변

- 각계각층에서 가장 많은 공천부적격 사유가 제시됨

9) 김무성 “아기 많이 낳는 순서대로 여성 비례 공천 줘야”(한겨레신문 2014.11.03.)

4) 김효재(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서울 성북을)

- 주요경력 : 18대 국회의원(2008.05 ~ 2011.08)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2011.06 ~ 2012.02)
- 심판명단 제안 단체 : 서울시민연대, 참여연대, 시민제보

○ 선정사유

① 민주주의 훼손 범죄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하여 징역형 선고

-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중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한 디도스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수사 정보를 수사 대상자(최구식 의원¹⁰⁾ 등)에게 누설하여(공무상비밀누설) 2012년 12월 27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 사면이 되지 않았다면 출마자격 조차 갖출 수 없었음에도 이명박 정부 말기(2013.1.31.) 전격 사면되어 출마

② 정당민주주의 훼손한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유죄

-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박희태 대표가 돈봉투를 돌린 사건에 연루되어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정당 민주주의 훼손

○ 선정의 변

-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 관련 정보를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관련자에게 누설하여 실형이 확정. 공직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

10) 이 사건 핵심 책임자인 최구식 전 의원도 검토되었으나 공천에서 탈락하여 제외

5) 윤상현(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남구울)

- 주요경력 : 18, 19대 국회의원
- 공천부적격 제안 단체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시민제보

○ 선정사유

① 불법으로 유출된 NLL 관련 정상회담 대화록 말바꾸기11)

- 2013년 원내수석부대표 시절에는 정문헌 의원과 김무성 의원에 동조하며 노무현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주장했다가, 2014년 5월 8일 기자회견에서는 노무현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이 한 번도 없었다고 스스로 번복 (2014년 5월 8일 기자회견)

② 공천과 관련하여 공작정치 의혹 및 막말로 정당민주주의 훼손

- 2015년 3월 초 한 언론사에 의해 공개된 녹음파일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에서 “김무성이 죽여 버리게. 이 xx, 다 죽여, 그래서 전화했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쉰아내라고, 쉰아내서 공천에서 떨어뜨려 버려야 한다고... 내일 공략해야 돼” 라고 발언
- 민주적 공천 과정을 부정하고, 특정 세력과 권력을 이용해 당 대표 마저 공천에서 떨어뜨리겠다는 단언한 것으로 정당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

○ 선정의 변

- 불법 유출된 대화록을 정쟁에 활용하고 남북문제의 국내 정치 악용에 앞장서다가, 진상이 드러나자 말 바꾸기로 빠져나가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공작정치 의혹과 막말의 당사자로 당 내부에서도 정계은퇴를 요구받고 있음.

6) 윤종기(더불어민주당, 전인천지방경찰청장, 인천 연수울)_공천철회 요구

- 주요경력 : 인천지방경찰청장
- 공천철회 요구 제안 단체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선정사유

① 인권을 침해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책임자

- 윤종기 후보자는 육지경찰을 총괄하는 TF팀장으로, 당시 육지경찰 파견은 강정마을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가 심각해지게 된 원인 중 하나였음. 경찰은 2011년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광범위한 기간 강정마을 일대의 집회를 금지함. 2011년 당시 강정마을 일대 집회신고에 대해 ‘육외집회시위 금지통고’가 내려진 것은 25차례.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금지통고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였음.
- 중덕 삼거리에 펜스 설치를 위해 공권력이 투입되었던 9월 2일 당일에는 현장과는 상관없는 구간까지, 강정마을과 외부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통제하고, 공항 리무진버스도 노선을 변경해 운행하도록 하는 등 이동의 자유도 침해.
- 2011년 9월 당시 해군기지 공사장 주변은 물론 골목길 등에도 경찰이 배치되어,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를 호소한 바 있음.

② 2011년 해군기지 반대 농성 해산 국가폭력 현장 책임자

- 윤종기 예비후보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2011년 9월 2일 1,000여명의 공권력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농성하던 주민과 활동가들을 진압한 현장책임자. 당시 위험한 작전을 강행해 다수의 부상자 발생.
- 경찰을 지휘하여 사전에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던 주요 인사들을 추적, 노상에서 체포하는가 하면, 9월 2일 당일에만 송영섭 목사, 이강서 신부, 송영홍 신부 등 종교인을 포함, 주민과 활동가 35명을 연행했으나, 실제로는 18명만 기소하여 무리하고 과도한 연행이었던 것으로 평가.

11) 김무성 후보 낙선촉구 사유에서 밝힌 것처럼, 관련해서 NLL대화록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정문헌 의원도 낙선대상으로 검토 했으나 공천에서 탈락하여 제외됨

③ 공권력 투입에 반대한 당시 민주당의 당론과 반대되는 인물

- 2011년 9월 2일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공권력 투입은 4.3 사건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하며,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중지하고 평화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함.
- 공권력 투입의 책임자에 대한 이번 전략공천은 과거 민주당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임

○ 선정의 변

- 국가의 공권력인 경찰력을 남용하여 강정주민들과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책임자로 공천이 철회되어야 함

7. 조전혁 (새누리당, 전국회의원, 인천 남동을)_공천철회 요구

- 주요경력 : 18대 국회의원, 명지대학교수
- 공천철회 요구 제안 단체 : 인천평화복지연대, 2016총선넷인천유권자위원회

○ 선정사유

① 법원의 금지결정을 무시하고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여 손해배상

- 2010년 4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사단체(한국교총, 전교조, 한국교원, 자유교육연합, 대한교조)등에 소속된 교원(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 공립/사립 포함 등) 명단 22만명(전교조 6만명) 가량 각 조합원의 재직 학교명과 실명, 담당교과 항목 등을 대중에 공개함.
-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명단공개로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의 결사의 자유와 교사단체에 가입한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함

② 역사교과서 국정화에도 앞장섬

- 2015년에는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 특별위원회'에 원외 인사로 참여해, 역사정의를 파괴하고 권력에 좌지우지되는 역사교육을 실행하게 만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기도 함.

③ 막말과 색깔론

- 2010년 12월, 민주노동당을 "조선노동당의 줄개"로 비하하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색깔론을 펼치는 등 끊임없는 색깔론과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 선정의 변

- 개인정보이자 민감정보¹²⁾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가입 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임. 이러한 정보를 법원의 금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음.

12) 개인정보보호법(23조)은 '사상·신명,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관리하거나 처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음.

8) '시민 컷오프' 국민감시법 '테러방지법' 주도의원 심판명단 및 근거자료(인권시민사회단체 제출13)

○ 선정의 변

- 이철우, 이노근, 하태경, 박민식 의원은 국민감시법인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및 관련 부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 자유를 사랑하는 시민의 이름으로 '컷오프'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민 컷오프' 대상으로 선정하여 발표하게 됨

번호	이름	소속정당	주요 경력 (현직 포함)	출마형식	발의 법안 문제점
1	이철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경북 김천	1)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2015.5.19.) - 공공·민간 영역 간에 공유하는 '사이버위협정보'를 정의하고,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 설치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2016.2.22.) - '테러위협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협인물'로 분류될 수 있음. - 제 9조 테러위협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 정보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해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조항을 다소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
2	이노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노원구청장	서울 노원구갑	1)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15.3.12.) - 대테러활동 관련 대통령 소속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대테러활동과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협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업무 수행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게 하여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부여 2)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15.6.24.) - 사이버공격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민간 협의체 구성,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전센터 설치하여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 - 국정원장이 관계기관에 사이버테러 혐의자의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음
3	하태경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부산 해운대구갑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3.3.26.) -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 국정원장이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실시, 수준별 사

13) ※ 이번 명단에서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한 송영근 의원('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과 이병석 의원('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발의)은 제외함, 서상기 의원(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과 주호영 의원(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 발의)도 인권시민사회단체 발표 명단에는 포함되었으나 3/14일 컷오프로 공천에서 배제되어 제외

번호	이름	소속정당	주요 경력 (현직 포함)	출마형식	발의 법안 문제점
			대변인		이러위기 경보 발령, 사이버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 -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과(제 14조 1항)하여 권한남용 우려가 있음
4	박민식	새누리당	현)국회의원	부산 북구· 강서구 갑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3.6.) - '테러위협인물'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정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 제 7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 '국가안보위해 범죄행위'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금융정보의 오남용 및 악용 가능성이 높음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5.6.1.) - 범죄수사,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휴대폰 감청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 인터넷, SNS 등 국내 모든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고 의무불이행시 제재함 - 이동통신은 물론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메신저, 메신저 기능을 가진 게임, 이메일 등 모두 감청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수사권 오남용 및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

▣ 붙임 3. 2016총선넷 향후 사업계획

2016총선넷 향후 사업계획

1. 공천 부적격자 낙천·낙선운동 전개

1) 2016총선넷 1·2차 낙천축구 명단의 범국민적 공유

- 온·오프라인, SNS, 전국 시민사회단체 회원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유권자의 3/4에 해당하는 3천만 명에게 공유하기
- 각 부문별·의제별·지역별 낙천축구 명단과 함께, 총선넷 차원의 낙천축구자 종합명단에 대한 카드뉴스, 웹자보, 웹만화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집중 홍보
- 2016총선넷 “3분 총선” 페이지를 통해 입체적인 홍보 진행
- 전국 유권자 단체들과 풀뿌리시민단체, 각종 커뮤니티와 다종다양한 네티즌모임들과 연대·공조 확대

2) 공천부적격자 공천 반대 캠페인

- 낙천운동 대상자로 선정된 인사들(2016총선넷 선정+각계각층 선정)에 대한 정보와 공천 부적격자로서의 선정 근거를 각 정당 지도부에 전달(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등)
- 각계각층, 부문별·의제별·지역별·단체별로 주요 낙천축구 대상자 사무실 앞이나 정당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낙천 축구 대상임을 밝히고, 낙천 축구 입장 발표 및 전달
- 온·오프라인에서 공천 부적격 인사들에 대한 낙천 축구 캠페인 진행하고(“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이미 공천이 확정된 경우라도 공천 철회를 요청하고 축구

3)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및 낙선운동 전개

-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된 이들 중 공천이 강행된 이들과, 추가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후보자를 중심으로 3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을 위한 광범위한 리서치 및 국민들의 의견수렴 진행

- 2016총선넷이 발표한 공천부적격 인사들이 공천이 강행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
- 각계각층, 부문별·의제별·지역별, 각 단체별 낙선운동 대상자 발표와 병행
- 4.2(토) 전국 유권자위원회 워크숍 통해 최종 낙선대상자 선정(예정)
- 4월 3일~4월 12일까지 전국적 범위에서 낙선운동 전개 : 낙선운동 대상자가 있는 지역으로 “낙선버스” 또는 “도보 순례”, “항의 방문” 등을 통한 낙선 촉구(구체적인 행동계획은 미확정상태로 논의 중에 있음). 낙선운동 대상자 사무실 앞 기자회견 개최 또는 요소요소에서 1인 캠페인 진행 등
- 전국 유권자위원회와 온·오프라인 통해서 낙선 대상자 중에서도 지역별 최악의 후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과 공유
- 낙선운동 대상자를 전국의 유권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캠페인 진행

4) 노동개약 강행 주도 후보,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후보에 대한 특별한 대응

- 테러방지 국민감시 악법인 ‘테러방지법’ 강행주도 후보들(법안 대표발의자 등)에 대해서는 2016총선넷 차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별도로 낙선운동 추진.
- 노동개약 중단 촉구, 노동개약 정당·후보 심판 선언 추진.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경제민주화와 이들의 총선연대, 총선청년네트워크 등과 함께 공동 선언 발표하고, 공동 활동 전개 예정.

2. 총선 정책운동, 약속 캠페인

1) 취지

- 총선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좋은 정책으로 모을 수 있도록 주요 정책에 대한 공론화
- 각 당과 후보자에게 좋은 정책을 약속하게 만들어, 총선 후 20대 국회 구성 이후 이행의 기반 마련
- 정책쟁점이 이슈화되는 정책선거도 추진하고, 시민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함.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제안 캠페인도 병행.

2) 진행로드맵(안)

- 총선넷 참여 단체들의 약속의제 제출(~ 3.18)
- 시민들의 정책제안 캠페인 진행 (3.14~3.24)
- 시민(유권자위원회)들이 모인 행사를 통해 총선 의제 논의 (3.22일 저녁)
- 약속의제 최종 선정 (3.25일 총선넷 운영위)
-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총선넷이 제안하는 정책·약속 의제 질의와 회신(3.28일 발송~4.3일까지 받음)
- 약속운동 결과 발표(4월 초순 발표 및 3분 총선에 반영)
- 약속운동에 따른 투표 참여 호소(~4.12일)

3) 약속의제 선정방식

- 시민들 제보 및 유권자 위원회 행사를 통한 시민제안 정책 과제 정리
- 총선넷 정책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중복, 유사, 주제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최종 20~30개 내외로 선정 예정. 각계각층의 단체들과 시민들이 제안하는 정책과제를 모두 모아 보여주는 것도 병행.

4) 약속의제 질의와 회신, 홍보

- 후보등록자 전원에게 발송하고 결과 분석, 발표. "3분 총선" 페이지를 포함한 홈페이지 게시

- 전부 or 일정 개수 이상 약속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총선넷이 (가칭)약속왕으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
- 각 지역 시민들이 직접 태그를 걸어, 총선넷 약속결과와 후보자 선거벽보를 SNS에 올리는 캠페인 (ex) 우리동네 약속왕은 누구? #서울중로약속왕 #대구달서약속왕

5) 3.22(화) 총선넷 유권자위원회 1차 모임 및 정책파티

- 일시 및 장소 : 3. 22.(화) 오후 7시 참여연대 아람드리홀(2층 강당)
- 제목: "2016 총선, 유권자 파티"
 - (1) 인사말 및 자료영상 (총선 정책 카드뉴스 or 동영상)
 - (2) 테이블토크: "이번 총선의 키워드?" "총선 내가 원하는 정책?" 테이블 별로 키워드 및 원하는 정책을 3가지 정도 떠올려 보고, 모아서 논의하는 시간
 - (3) 테이블별 발표 및 공유
 - (4) 종합 토론

3. 2016총선 유권자위원회 활동 전개

1) 유권자위원회 모집 공고

자급자족 유기농 정치프로젝트 "정치는 내가 요리한다"

삼시세끼 유권자위원회

- 활동 기간 : 3월 13일 부터 4월 13일 까지
- 활동 내용 :

1. 낙천낙선리스트 널리널리
2. 유권자落魄티 함께함께
3. 시민 정보원 총선 검색왕 3분 총선
4. 투표는 나의 힘 ONE PEOPLE ONE VOTE
5. 뭐든지 합시다. 당신은 좋아요!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goo.gl/forms/qm5fqhJVhX>

문의 : ask2016change@gmail.com

2) 유권자위원회 규모와 구조

- 2016총선, 뭐라도 합시다. 당신이 좋아요!
"살맛, 일할맛, 투표할맛" "정치의 맛"
- 삼시세끼 유권자위원회 1만~10만까지 추진
- 총선넷 참여단체, 네티즌, 시민 등 1만 유권자위원회를 1차 목표.
- 총선넷 참가단체 개별단체 10명, 의제단체 100명이상
- 다양한 유권자운동 단위와 공동협력 네트워크 가동 : 3.16공동선언(예정)
- 총선넷 홈페이지 www.2016change.net에서 시민들이 직접 가입 중
- 시민정보원 총선검색왕 <3분총선>를 직접 광고한다.
"잘 찍으면 바뀐다. 3분만 투자하세요."
- 투표는 나의 힘! ONE PEOPLE ONE VOTE
- 동네마다 기발한 현수막 걸기 캠페인
- 우리동네 총선문자 자랑대회

- 413명 1인 시위(4.8불금저녁), 4,013명 1인 소요(4.12-13 출근)

하루 세번, 식후 30분 이내, 대한민국을 바꾸는 긴급처방전

삼시세끼 유권자 상비약

대한민국 유권자 귀하

1 일 3 회 30 일분

- 식후 30분 식후 1시간 식후 2시간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텔레그램

주의사항 : 지나친 가입과 참여는
한국정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복용기간 : 2016년 3월 부터 4월 13일 까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삼시세끼 유권자 위원회
www.2016change.net

페이스북: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트위터:@2016changenet



4. 전국 유권자단체 공동 선언 및 공동 캠페인

1) 공동 캠페인 개요

- 총선넷 참여 단체들이나 참여하지는 않지만 유권자 운동 및 유권자 캠페인을 명확하게 표방하고 있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모임과 협력 확대
- 3.16(수) 오전 11시반, 전국 유권자단체 공동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개최(예정)
- 전국 20여 유권자단체 공동 주최

2) 유권자 단체 공동 캠페인 내용

- 유권자들의 즐겁고 뜻 깊게 참여할 수 있는 선거분위기 조성
- 다 같이 대규모 투표 참여 운동
- 낙천낙선 대상자 공동 홍보 및 온·오프라인 적극 전파
- 집권여당의 공약이행 평가 내용과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정보 공유 캠페인
- 국가기관 및 관변단체의 불법선거감시 공동캠페인인 : 국정원장 면담 요청, 국정원 항의 방문, 국정원·보훈처·국방부 등에 대한 공동 감시 캠페인
- 투표 당일 및 개표현장에서의 부정 감시 공동대응(시민 개표참관 캠페인)

3) 전국 유권자단체 공동 캠페인단

- 1차적으로는 4.13 총선까지 한시적 운영
- 총선 후에는 공약 이행 공동 감시, 이행 촉구 활동
- 향후 대선 때까지 유권자 캠페인 공조와 협력틀 유지

4) 참가 단체들 연명

- 2016총선넷, 시민의날개, 백만명1인등불국민행동, 시민정치마당, 미권스, 희망정치네트워크, 평화통일기독인연대, 레인보우보트, 민주노총, 참여연대, 선거파티, 총선청년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시민평화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청년참여연대 등(계속 확대중)

5. 국가기관 및 관변단체 등 불법·부당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

- 2016총선넷과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에서 시민 제보 캠페인 진행 중
- 선관위 1차 항의방문(3/7)에 이어 선관위에 대한 대응 지속
-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공익적 캠페인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할 게 아니라, 국가기관 및 관변단체의 불법·부당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
-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공식 면담 추진(3/11 공문 발송)
- 면담 불응시 항의 방문하여 이번 총선에서 국정원, 국방부, 군, 보훈처 등이 완전히 손을 떼도록 철저히 대응할 예정
-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요구 등 관제서명 주도하는 기관에 대한 항의 및 감시 활동
- 군 교육이나 민방위 교육장 등에서 선거에 대한 부당한 개입 감시

박근혜 대통령은 부당한 선거개입 중단하라 !

‘진박’ 인사 위한 대구지역 방문은 국민 우롱하는 불법선거운동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 “창조경제 성과 확산을 독려” 한다며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것도 여당 내부의 공천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명백하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것이다. 너무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황당할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인사들의 공천과 당선을 돕는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지역은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수성구 등으로, 이른바 ‘진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인사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역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방문이 후보들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조정하거나 방문 지역을 변경하지 않았다.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순수한 “민생 행보”일 뿐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하고,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아무리 부인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의 메시지로 읽혔을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이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대구를 챙겨주려는 시도 자체는 좋은 것”이라며,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에게 호감이 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방문이 지역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청와대는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발뺌할 것인가?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행위이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역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몇 마디 말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했다. 선례에 비추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헌법 상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장 행보를 빙자한 청와대발 선거운동이 계속되는 것을 국민들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중립 의무 위반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자유롭게 선출될 수 있도록 더 이상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2016년 3월 15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 붙임 5. 2016총선넷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_3/3 발표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이름	직책	소속	지역구	선정 사유
1	황우여	현) 국회의원	새누리당	인천 연수 갑	-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 누리과정 예산 배정 방치
2	최경환	현) 국회의원	새누리당	경북 경산 시청도군	- 경제민주화 실종과 민생파탄 책임자 - 재벌특혜 및 노동계약 주도 - 인턴 취업 청탁
3	김진태	현) 국회의원	새누리당	강원 춘천 시	- 국회 윤리위 4회 제소 - 잦은 막말과 색깔론 - 백남기 농민 경찰 폭력 두둔
4	이노근	현) 국회의원	새누리당	서울 노원 갑	- 원전확대 등 반환경정책 옹호 - 서민주거정책 역행 - 잦은 막말
5	김현중	전) 통상교섭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 갑	- 한미FTA협상 최종 책임자 - 교섭과정서 부적절 언행
6	김석기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새누리당	경북 경주	- 용산참사 책임자 - 총선 출마위해 공직 중도사퇴
7	한상률	전 국세청장	새누리당	충남 서산 태안	- 정권 위한 표적 세무조사 주도 - 그림로비 의혹으로 해외도피
8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새누리당	울 산 남 구 갑	- 스폰서 검사 의혹 당사자
9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새누리당	대구 달서 구을	-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누락으로 대선 영향 - 국회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